

본 자료는 보험연구원이 2020년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험정책 방향



금융발전심의회
2019.12.23

목 차

I.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

II. 보험정책 평가

III. 2020년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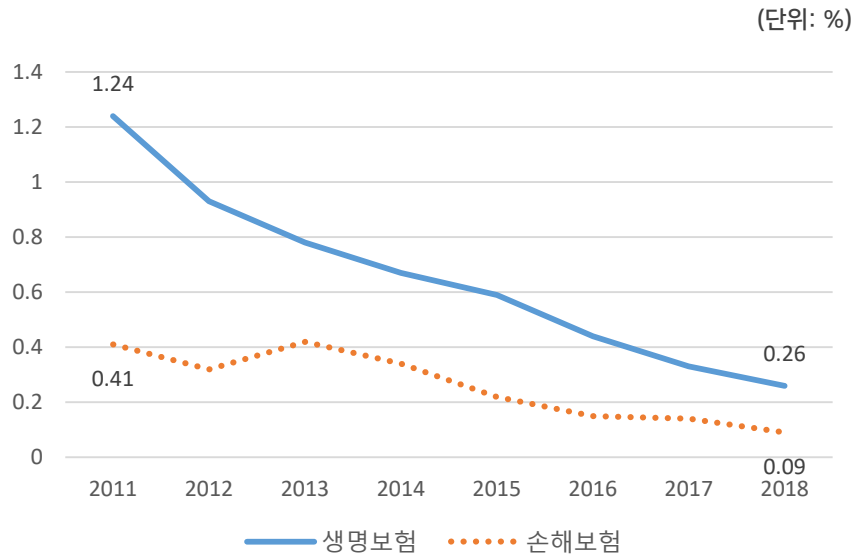
I .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

1.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
2.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
3.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
4.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1.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

- 불완전 판매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판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약유지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

불완전 판매 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비교(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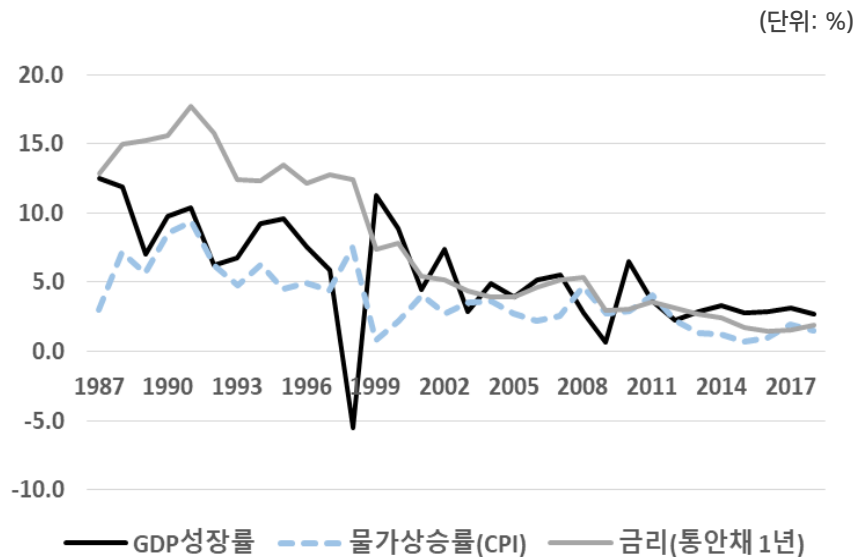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2.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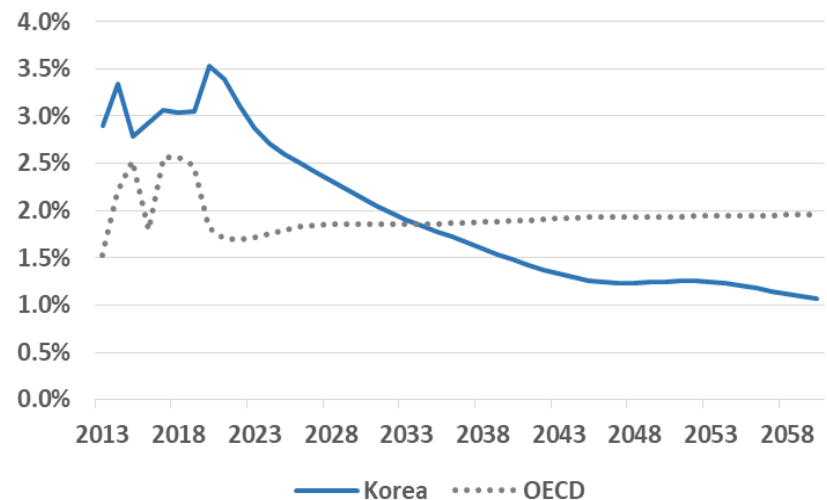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 될 수 있음
-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변화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가 금리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금리·물가·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잠재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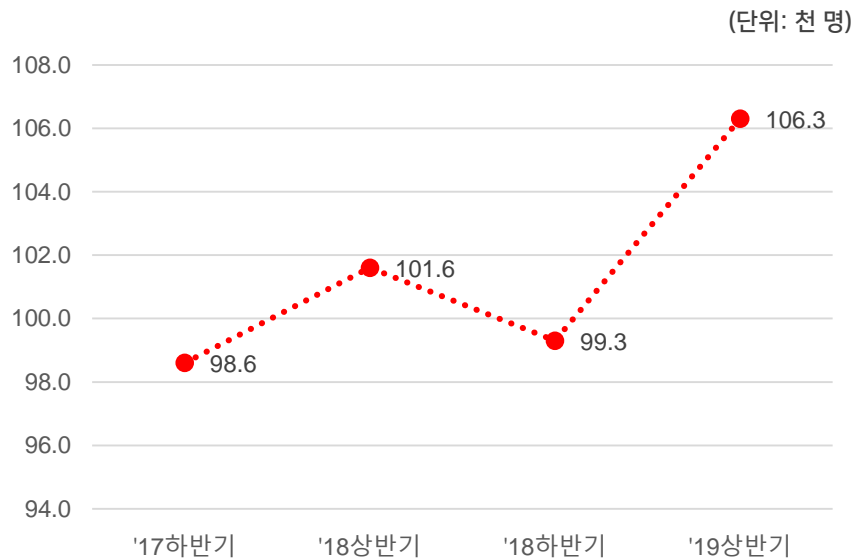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9

3.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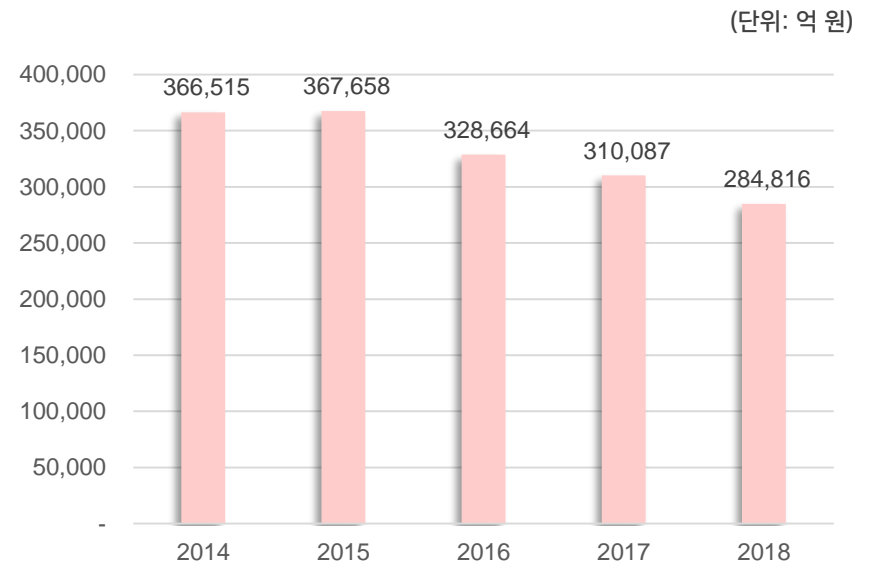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개인연금보험은 저금리 환경,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 영업손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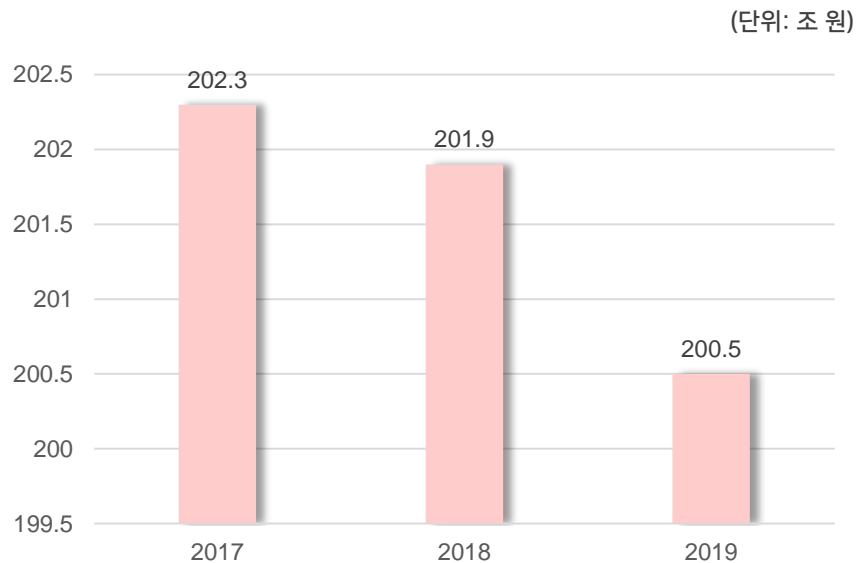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실적통계

4.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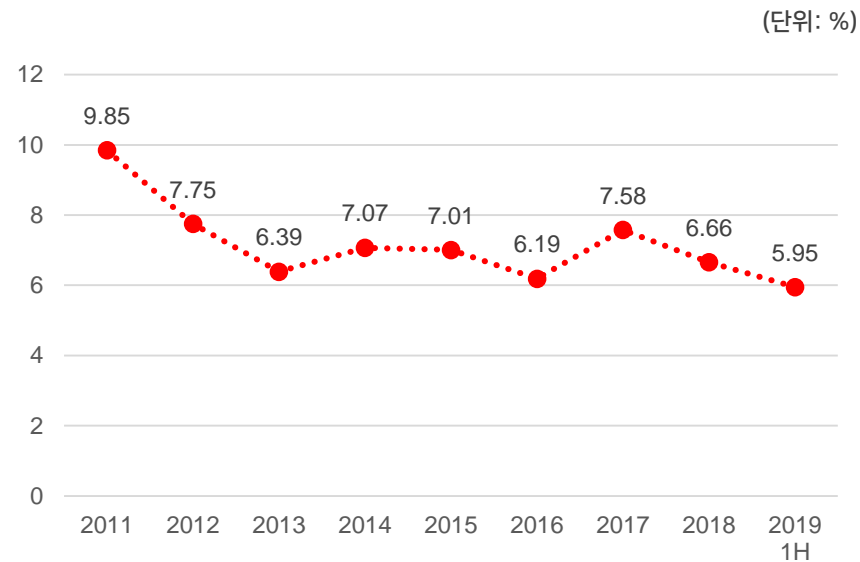
-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지속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
- 2019년 상반기 보험산업 전체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95%로 6%대 이하로 감소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II . 보험정책 평가

1. 소비자보호
2. 건전성규제
3. 인슈어테크

1. 소비자보호

주요 정책

정책 평가

보험 약관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작업 추진
- 약관 개선 실무 T/F(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보험업계) 및 약관순화위원회(법률전문가 등) 운영

-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이와 더불어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개선 작업 병행 필요

모집 수수료

-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 추진
-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 분할지급 방식 도입

- 모집종사자의 **인센티브**가 소비자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수수료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가 예상
- **보수구조** 개편과 더불어 불완전 판매 시 **배상책임체계** 개편도 병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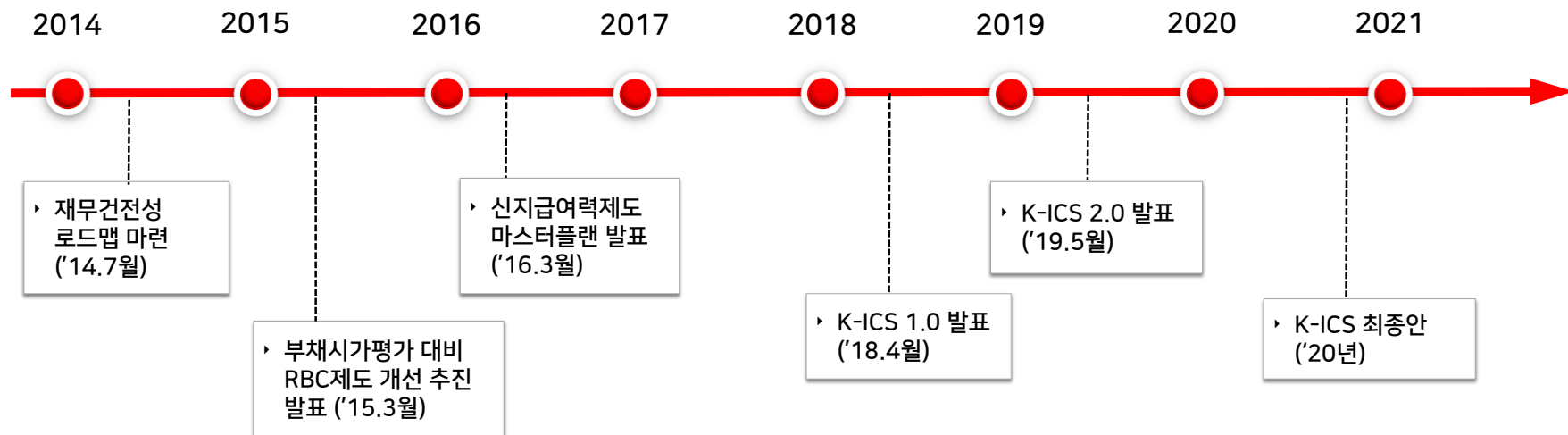
2. 건전성규제

주요 정책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IFRS 17 시행시기에 맞춰 K-ICS 도입 추진
-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회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착륙 방안 제시

정책 평가

-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보험회사가 자구 노력을 통해 저금리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필요



3. 인슈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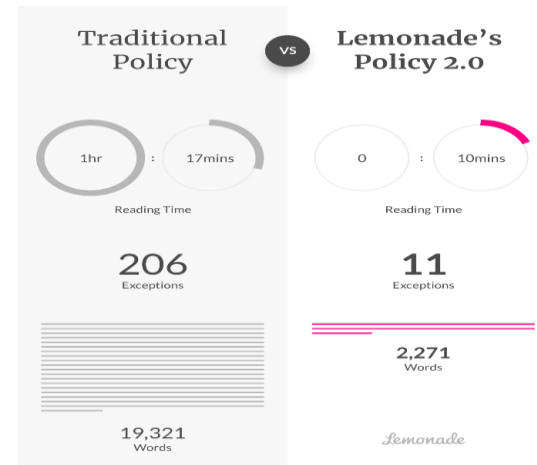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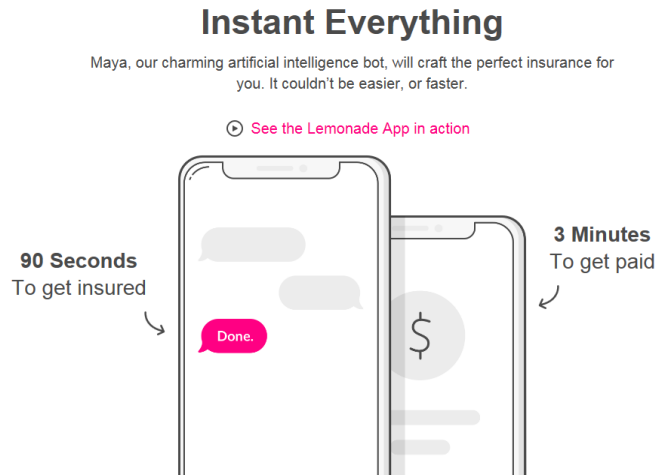
주요 정책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정책 평가

- 'ON-OFF 해외여행자보험' 등 다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도입됨
-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분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입절차 간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점은 한계임

해외 혁신사례: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Lemonade



III. 2020년 정책 제언

1.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2.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3.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개요

현황 이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정책 목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정책 과제	판매단계	지급단계	자본관련	부채관련	실손보험	연금보험	모럴해저드	진입퇴출
	대형 GA 규제 혁신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자본규제 연착륙	부채구조조정 정책지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장기가치제고 경영전략 유도	인슈어테크 규제 개선
	상품설명서 · 약관 개선						보험사기 방지대책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 정비

1-1.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규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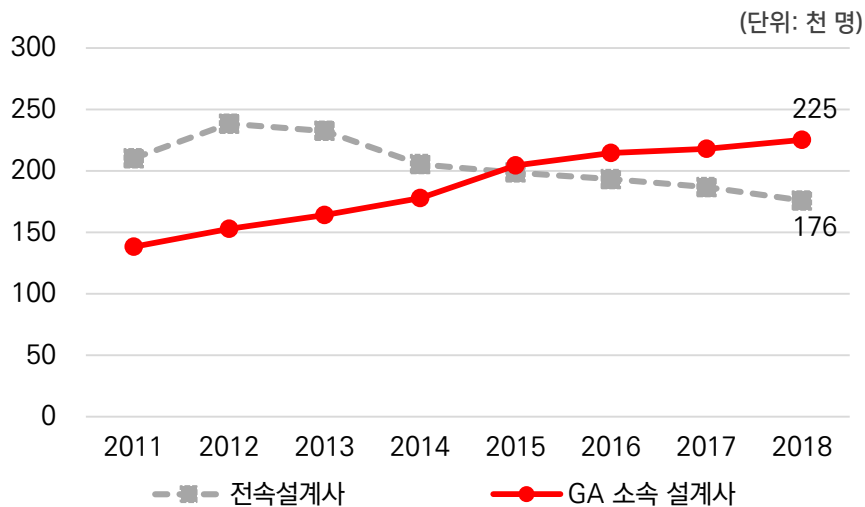
검토 배경

- 판매채널 구조 변화: 보험회사-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 → 보험회사-GA-보험설계사의 3원 중심 구조

추진 방안

-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책임체계를 3원 중심 판매채널 구조에 상응하는 체계로 개편

설계사 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참고] 호주사례

-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판매업자의 배상자력 수단 마련과 관련하여 대안② 선택
대안①: 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대안②: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소요건 지정
대안③: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세부내용 지정
대안④: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금조성
대안⑤: 규제기관에 영업보증금 예탁

1-2.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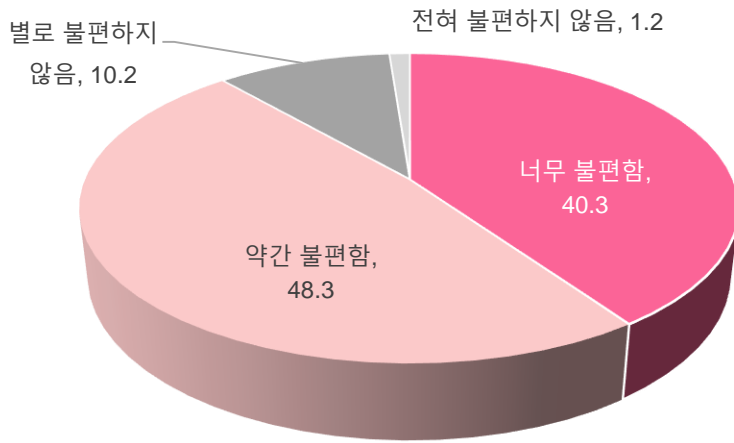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6%

추진 방안

-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개선에 **행동경제학** 또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약관·상품설명서 평가

(단위: %)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 미국 레모네이드 Policy2.0 사례

- 미국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레모네이드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Policy2.0 공개
- Policy2.0은 오픈 플랫폼 체계 하에서 소비자, 규제당국, 보험회사 등이 약관 수정
- 세입자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약관은 읽는데 평균 1시간 17분이 걸렸으나, Policy2.0은 10분으로 단축되었음

1-3.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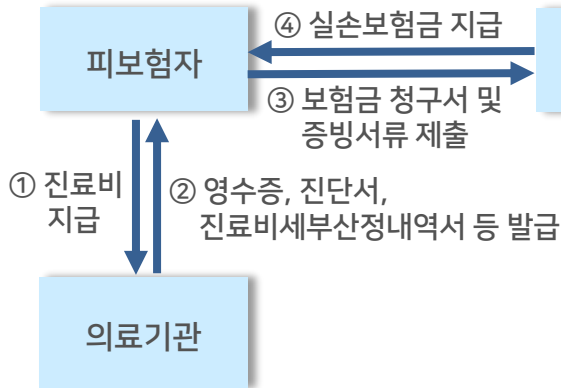
검토 배경

- 실손의료보험은 전산화되지 않은 청구·지급체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 초래
-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자 가운데 16.7%가 청구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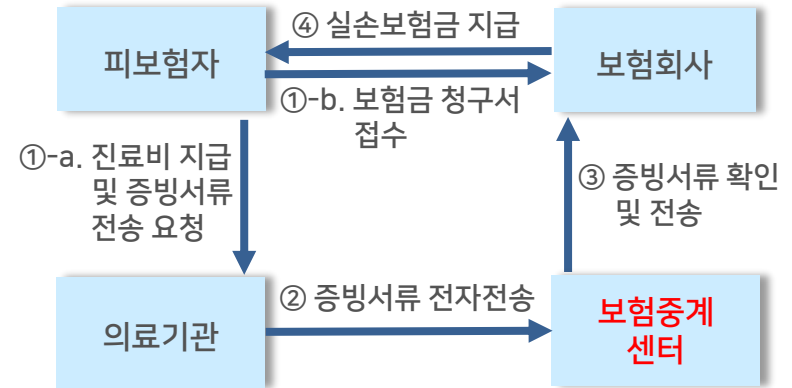
추진 방안

-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피보험자의 증빙서류 전송을 위해 **보험중계센터 설립**
-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보험금 청구체계



개선(안)



2-1. 자본규제 연착륙

검토 배경

- (도입시점) 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충격**이 상당하여 제도 수용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도입이후) K-ICS 도입 이후 **재무적 변동성**의 증가는 시장안정과 경제성장에 부작용 초래 가능

추진 방안

- (도입시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도입
- (도입이후)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재무적 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요구자본 조정** 등의 조치 필요

[참고] EU 사례

- 유럽 각국은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고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Solvency II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
- 보완조치는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재무적 영향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참고] Solvency II 보완조치 사례

	보완조치
경과조치	무위험이자율, 책임준비금 차이를 점진적 반영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무위험이자율에 금리 가산
주식위험	주식위험 충격을 대칭적으로 조정
재무건정성 회복기간	재무건전성 회복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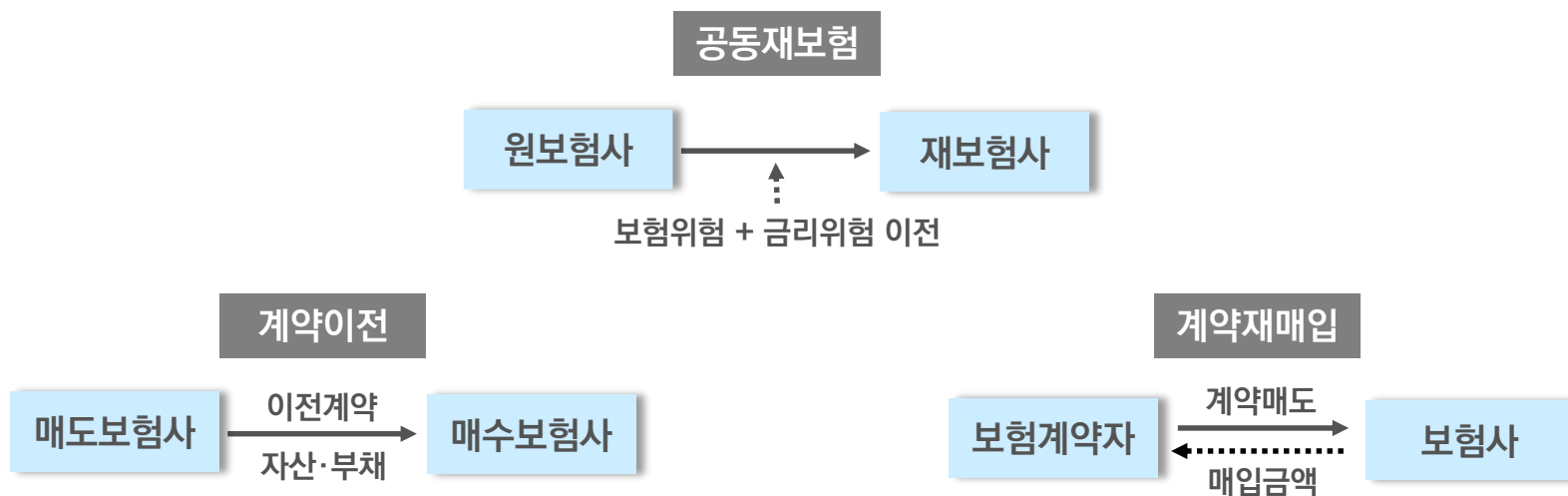
2-2. 원활한 부채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지원

검토 배경

- 부채구조조정 방안: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재매입(Buyback)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어려움

추진 방안

- 공동재보험: RBC 및 LAT에서 위험전가 효과 반영
- 계약이전과 계약재매입: 런오프(Run-off) 계약에 대한 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3-1.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검토 배경	추진 방안
요율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고,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보유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계약의 80%가 20년 이상의 잔여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 한계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 유도
심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의 가격 적정성 심사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또는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

3-2.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검토 배경

추진 방안

공급 측면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감소하여 타 보험상품 대비 수익성 악화
- **IFRS17**에서 개인연금보험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 **K-ICS** 하에서는 금리위험과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 발생
- **수수료 제도** 변화로 판매유인 감소

-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수요 측면

- 세제혜택 축소로 수요유인 감소

- 개인연금보험 수요진작을 위해 세제혜택 강화 검토

4-1. 보험회사의 장기가치제고 경영전략 유도정책

검토 배경

-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단기 성과주의**가 지적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단기 성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영자의 보상체계임

추진 방안

- 경영자 보수 공시 내용에 보상정책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 검토
- 점진적으로 장기성과 관련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는 유도 방안 마련

주요국 임원 보상체계

(단위: %)

	기본급 비중	성과급 비중		지표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미국	10~16	20	63~67	EPS	TSR
영국	35~41	24~26	35~38	EPS	TSR
독일	31	27~28	41~42	EPS	TSR

주: 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
TSR은 Total Shareholder Return의 약자

[참고] 미국의 보상정책 공시 사례

- 보상위원회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크게 임원보수에 대한 회사정책, 회사 실적과 임원보상과의 관계, 임원 보수결정에 사용한 기준과 지표의 공시 등임
- 미국에서 경영자 보수 공시의 핵심은 얼마나 지불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임

4-2. 보험사기 방지대책 마련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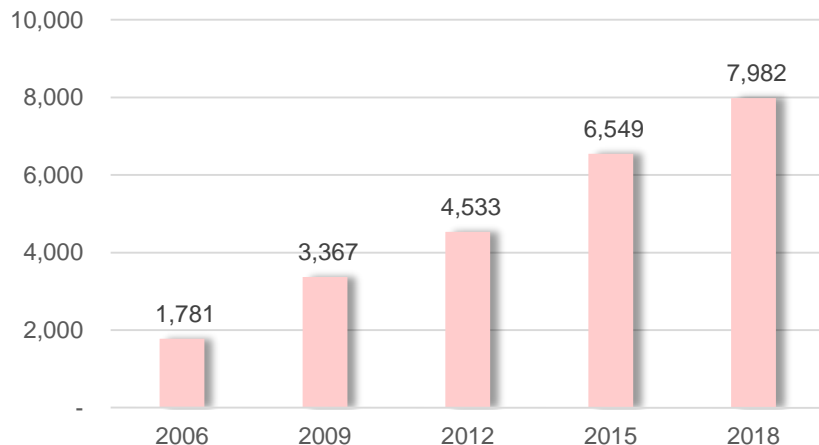
-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약 7,982억 원 기록
- 연성보험사기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추진 방안

- 민영보험, 공보험, 공제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연성보험사기 방지 대책 마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참고]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연성보험사기 방지 사례

- 영국 ABI는 2018년 Decision Technology에 의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연성보험사기 방지 연구 의뢰
- 행동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관련 온라인 실험 진행
- 보험가입 과정에서는 평균 36%, 보험금 청구에서는 평균 37%의 연성보험사기 감소 효과 존재

4-3.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검토 배경

- 공유경제와 직경제의 부상으로 소규모 인슈어테크에 적합한 틈새시장이 창출됨

[참고] 공유경제/직경제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희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를 의미 (사례: 숙박공유, 차량공유)
- 직경제(Gig Economy)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
- 공유경제와 직경제에서는 **초단기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진 방안

- 인슈어테크의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 테스트베드** 도입

[참고] 숙박공유 관련 보험 사례

- 가계성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Slice는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기 보험상품 제공
- 이들 동안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이들 동안 보장하는 보험상품 구입
- 재산피해나 배상책임 관련 보장한도가 200만 달러인 경우 하루 당 보험료는 4~7달러 정도임

4-4.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 정비

검토 배경

- 현행 보호한도 하에서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움
-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장기계약 이전과 관련된 제도 정비 필요

추진 방안

- 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 다만 예보료 인상, 업권간 이해상충, 자금이동 가능성 등의 고려 필요
- 계약이전제도는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재검토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초과 계약 비중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연 금	10.9	질병보험	4.2
종신보험	29.6	건강보험	3.6
정기보험	19.5	암 보 험	0.2
상해보험	1.0	-	-

자료: 보험개발원(2018), 『CY2018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참고] 캐나다 사례

- 캐나다 생명보험 예보기구인 Assuris는 설립 당시인 1990년에는 한국·미국 등과 비슷한 정액한도 보호방식이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규모가 증가하자, 정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방식을 도입

감사합니다
